남북 경협 - 통신 · 통행 · 통화의 자유 보장되어야

-4대 경협 합의 사항 발효, 투자 보장 완벽하면 개성공단 경쟁력 커 -

'소걸음도 3년이 지나니 제법 많이 왔네요.' 최근 들어 남북 경제 협력이 급류를 타고 있다. 지난 8월 21일 남북 간 4대 경협 합의서가 발효된 데 이어 26, 28일까지는 서울에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갖고 모두 9개 항으로 된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그 동안 경제 협력의 걸림돌이 돼 왔던 투자 보장 문제라든가 이중 과세 방지, 상사 분쟁 해결 절차 등 경협에 기본적인 문제들이 타결됐다.

또한,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개성공단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30일 착공식을 가졌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3년여 만에 겨우 첫 삽을 뜬 것이다. 당시만 해도 금새 북한에 한국 제품의 임가공 공장이 세워지고 양측 주민들이 오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더디기만 했다. 앞으로만 간 것도 아니고 때로는 퇴보하기도 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는 퇴보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서 이뤄지는 남북간의 경제적인 합의 등은 값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그러나 이제 겨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걸음을 뗐을 뿐이라는 평가이다. 앞으로도 남북 간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 경협 어디까지 와 있나

남북 경협은 제도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 등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는 남북 경협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금강산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사스로 인해 한동안 중단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대북 송금 등의 파문을 겪으면서도 금강산 관광사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4차례의 관광이 이뤄진 이후 중단된 금강산 육로 관광이 9월 1일부터 재개되었다. 배로는 4시간 30여분이 걸리지만 육로로는 속초에서 금강산 아래 온정리까지 1시간 30여분이 걸릴 뿐이다. 물론 이 시간도 통관시간을 빼면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 경협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공단 700만평을 비롯, 배후 단지까지 2000여 만평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이 가운데 시범단지 100여 만평은 이미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빠르면 내년쯤에는 분양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현대아산 관계자의 얘기이다. 입주는 2007년이지만 중소 업체들이 조기 입주를 원하고 있어 현대아산이 토지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분적으로 2~3년 내에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개성공단 관련 하위 규정이 마련되고 조직 운용 체계도 갖춰질 전망이다. 또한, 개성 관광도 같이 추진된다. 이 역시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시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적인 부분이다. 아무리 공단이 조성되고 길이 닦여 있어도 제도적으로 투자 보호 장치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보다 북한 진출에 더 소극적인 것은 바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최근에는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간 4대 경협 합의서이다. 지난 2000년 12월 16일 남북간 서명 이후 지난 21일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경협의 기

본인 투자 보장, 이중 과세 방지, 상사 분쟁 해결 절차, 청산 결제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남측이 투자한 자산을 북측이 보호해주고 또 투자자들의 출입이나 체류 보장, 상사 분쟁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지만 남북 경협에 있어서 진일보한 것이라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남북 쌍방이 6·15 남북 공동 선언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자며 모두 9개 항에 합의했다. 그 내용 중에는 개성공단 기반 시설 건설 착수, 금강산 관광 사업의 활성화, 남북간 상품 및 임가공 거래의 직접 거래 방식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 상품 및 임가공 상품의 직거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교역 관계는 간접 무역 형태였다. 중간에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직교역을 허용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이다. 시간이나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경우 남북 민간 사업자 간에 직접 계약서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상품의 운송도 한반도에 있는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 북한 물품 반입시에도 북한 원산지 증명이 있을 경우 비관세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나아가 내부적으로 남북 경협 준비 작업도 한창이다.

최근에는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개성공단을 방문, 입지 여건 등을 둘러보고 오기도 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정치적인 변수만 없다면 남북 경협은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면서, "이는 남북의 윈윈(win-win) 게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협, 우리 기업엔 어떤 이득이 있나

최근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온 주차 시설을 만드는 중소기업인은 거리나 분양 단가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어차피 국내에서는 임금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어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데 거리상으로나 임금으로 보면 개성공단이 적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대략 10만원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여기에는 전력이나 폐수 처리장 등의 건설을 국내 공단처럼 우리 정부가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국내 공단의 분양가는 작년 기준 시화공단이 56만원, 창원과 충북 오창이 44만원, 구미가 42만원대였다. 중국의 경우 상하이 근교 공단이 45만원, 심천 인근 소주공단이 19만원대이다. 물론 이보다 싼 곳도 있지만 변방이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 임금은 대략 65달러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8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중국은 45달러 선이다.

현대아산 이정우 이사는 "분양가나 임금 등은 물론 같은 민족으로 말이 통하고 또 기술 습득력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면서 "개성공단의 경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서울이나 일산에서 출퇴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는 대략 1시간 30분, 일산에서는 40여 분이 걸린다. 물론 교통 여건이 나아지면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도 가능하다.

선결 과제는

지금까지 남북 경협의 한계는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인 변수가 꼭 끼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 관계가 갖는 태생적 한계다. 당초 남북 경협도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지기 시작했고, 이후의 추진 과정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부침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양측이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췄지만 남북 관계가 긴장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갑작스럽게 왕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북한 행태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는 최대의 변수다.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대해 군침을 흘리면서도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북핵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핵 문제가 깔끔히 정리되어야 한다. 6차 회담으로 평화적 해결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앞으로 향배는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북측이 핵을 포기하고, 또 사찰에 응한다고 해도 사찰 과정에서 대상이나 방법 등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또 이 과정은 최소한 2~3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곳곳이 가시밭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시되는 것이 제도적인 장치이다.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고, 북측이 이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한국만이 아닌 국제 사회에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투자 보장과 통신, 통행, 통화(通貨) 등 3통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재계에서는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한국만이 아닌 일본 등 외국과도 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외국계 기업이 함께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것이 북측에 달렸다"면서 "이런 부분만 보장된다면 충분히 북측에 공장을 건설할 만하다"고 말했다. CJ

김성곤
대한매일 산업부 차장